

심야영업 단속 1년 달라진 풍속도

민생치안 확보와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이라는 취지로 지난해 1월부터 심야 유흥업소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심한 반발과 여론의 찬반 양론 등이 비등한 가운데 강행된 당국의 규제조치는 그동안 음주 양식의 변화, 술 소비량의 감소 등 긍정적 효과와 함께 신종 변태업소의 등장·영세상인들의 생계 타격 등 부정적 현상도 가져왔다. 지난 1년동안 심야영업 단속이 빚어낸 사회상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풍속도와 업소주인·상인들의 애환 등을 조명해 본다.

〈편집자〉

긍정적 효과

직장인들이 일주일 가운데 가장 술자리를 많이 갖는 금요일인 지난 11일 밤, 카페·로살롱·스탠드바 등 각종 유흥업소들이 밀집해 이른바 '먹자골목'이라 불리는 서울 강남구 서초동 강남지하철역 일대는 자정을 넘기면서 일제히 간판의 불이 꺼지고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몇분 전까지만 해도 각종 간판과 네온사인에서 쏟아져나오는 형형색색의 불빛으로 환란한 불야성을 이루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거리 전체가 갑자기 적막한 어둠에 휩싸이고 도로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 잡기에 바쁜 시민들로 북적덜 뿐이었다.

'제2의 통금 조치'로도 불리는 유흥업소에 대한 심야영업 단속 이후 완전히 달라진 서울의 밤 풍경이다. 물론 단속의 눈길을 피해 은밀히 변태영업을 하는 업소를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취객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2차·3차 등 '차수 변경'을 해가며 새벽까지 폭음할 수 있는 여건이 '원천봉쇄'되면서 '강제 절주'의 효과는 톡톡히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지난 1년 동안 심야영업 단속에 싫든 좋든 순응해 오면서 이 조치가 가져온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 회사원 정용직(29·동부건설 업무부)씨는 "정부가 시민들의 술자리까지 지나친 제약을 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심야영업 단속 뒤 무리한 음주를 안하게 돼 규칙적인 직장생활을 하게 됐고 경제적 부담도 덜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술 자체를 '미워하는' 가정주부들은 거의 절대적으로 심야영업 단속을 환영하고 있다. 주부 이현옥(32·서울 노원구 월계동 삼창아파트)씨는 "가끔 새벽 2~3시에 귀가하기도 하던 남편이 늦어도 자정만 조금 넘으면 돌아오고 있다"며 "단속시간을 오후 9시나 10시로 앞당겨 더욱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까지 했다.

실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해 12월3일부터 6일까지 전국 주부 등 4천9백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가장들의 귀가시간이 빨라졌다'는 응답이

전체의 83.1%에 이르러 달라진 음주 풍속도를 실감케 하고 있다. 이렇게 달라진 음주 풍속도는 술마시는 장소가 바뀐 데에서도 확인된다. 카페·레스토랑 등 업소에서 소비하는 주류의 판매량이 줄어든 대신 가정에서의 소비량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동양맥주 서서울지점 판매과 서현장(29)씨는 "지난 한해 동안 업소용으로 나간 맥주는 89년에 비해 6.7%가 줄어든 반면 가정용은 19.7%가 늘어 전체 판매량 가운데 업소용은 89년의 53%에서 49%로 떨어지고 가정용은 47%에서 51%로 늘었다"면서 "가

시작하면서 밝힌 취지는 "이들 업소가 각종 강력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야간통행금지 해제 이후 급증한 야간 치안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도 심야영업 단속은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심야영업 단속=강력범죄 감소'란 등식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치안 면에서나 구조적 원인처방 면에서나 크게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는 힘들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이와 관련, 치안본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야구자들이 직접 경영하는 대형업소들이 많고 이들 업소가 범죄단체의 '돈줄'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이와는 다르다"면서 "따라서 심야영업 단속을 곧바로 강력범죄 퇴치로 연결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심야영업 단속 이후 유흥가 주변에서 벌어지는 단순폭력 사건이 크게 줄어든 것은 눈에 띄는 현상이다. 서울 청량리경찰서의 한 형사는 "음주 뒤 단순한 시비 끝에 벌어지는 폭력사건이 단속 이

한 시비가, 다툼 때는 하루에 10건씩 될 때도 있었으나 요즘에는 평균 3건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선경찰관들은 심야영업 단속으로 교통사고도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분석한다. 서울 서부경찰서 교통계 손창규 경장은 "관내 교통사고가 89년에는 4천3백50건에 이르던 것이 90년에는 3천6백90건으로 15%나 줄었다"면서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심야영업 단속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심야에 싸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는 환자도 크게 줄어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응급환자수가 하루 70명선에서 50~55명 정도로 떨어지는 등 심야영업 단속의 긍정적 효과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긍정적 효과에 고무된 당국은 올해에는 단속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쥘 채비를 갖추고 있다. 지난해 행정공무원·경찰 등 연인원 1백97만여명을 동원, 전체 업소의 37.5%에 해당하는 15만4천9백여 업소를 적발하는 '실적'을 올렸던 당국은 올해 안에 위반업소를 근절한다는 방침아래 특별명기동반·기동단속반 운영 등 단속 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당국의 의지가 '망국병'으로까지 일컬어지는 향락·퇴폐·과소비 추방에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할 것인지, 또한 이로 인해 변화될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다. <김종구 기자>

가정용 술 소비량 업소용 앞질러

유흥업소 된서리...종사자 37% 떠나 단순폭력·음주 교통사고 크게 줄어

정용 소비량이 업소용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심야영업 규제 이후 점차 줄어들기 시작한 술 소비량은 지난 10·13 조처로 단속의 고삐가 한층 강화되면서 더욱 급격한 하향곡선을 그려 양주는 33.2%, 맥주는 23.9% 등 평균 20.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요 유흥업소의 전력 소비량도 40% 정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돼 심야영업 단속에 따른 물자·에너지 절약 효과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흥업 종사자도 89년 12월에는 65만5천명이던 것이 41만4천명으로 37% 줄었으며 구로·마산·구미 등 전국 10개 주요 공단 제조업체 노동자의 이직률도 89년에 비해 0.8%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유흥업소 휴·폐업이 11월 한달 동안에만 1천8백3곳에 이르고 유흥업소의 권리금이 크게 떨어지는가 하면 고급호텔의 연말연시 예약률도 89년 12월에는 9천3백81건이던 것이 지난해말에는 4천5백5건으로 줄어드는 등 심야영업 단속이 여러가지 가지적 성과를 남긴 것으로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심야영업 단속의 고삐를 계속 죄어나가면 향락산업은 결국 사양길에 접어들 것이라는 다소 성급한 낙관론마저 대두하고 있다.

심야영업 단속이 민생치안에 끼친 효과는 어떤 것인가. 애초 정부가 심야영업 규제를

전에는 하루밤에 7~8건씩 됐으나 단속 이후 2~3건으로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관내에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는 서대문경찰서 신촌파출소에 근무하는 감삼선 순경도 "예전에는 술에 취해 일어나는 자질구레